

LGBT PAPER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를 줄인 말입니다.

2006 여름호

판매가 1,000원 - 소식지 수익금은 다음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쓰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11번지 5층 Tel 02)778_9982 Fax 02)775_9983

발행일 - 2006년 7월 15일
발행처 - 동성애자 인권연대 출판부
발행인 - 정을
편집 디자인 - IN design 강태성

소쿠리

여름이 물들어간다.

by_ 혜와 (동성애자 인권연대 회원)

2006년도 이제 벌써 반이나 지나, 동인연 소식지도 여름호를 발간하게 되었다.

지난 상반기를 돌이켜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군대 내에서 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우리 단체에 도움을 청한 어느 동성애자의 절박한 이야기가 뉴스와 신문지상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고, 古 육우당의 3주기 추모식이 열려 그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하기도 했다. 육우당의 사를 모아 책으로 엮기도 했고, 그에 대한 소식이 출판되기도 했다.

또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집회에 레인보우 깃발을 높이 들고 나서기도 했으며, 평택 미군기지 화상에 대항하는 운동에 동성애자인권단체로서 함께하기도 했던 것 같은 시간들이었다. 그 밖에도 에이즈 예방법 개정문제, 성전환자 성별 정정 문제 등등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들에 동인연은 언제나 빠지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었다.

날씨가 제법 후텁지근하다. 세상은 아직도 이 켜는 듯한 무더위만큼이나 혼란스럽고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

넷상에서 호모포비아들의 욕설에 가까운 댓글이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동성애자를 문란한 족속들로 몰아가는 언론의 기사들을 여파다 마주칠 때면 더욱더 그러하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원초적인 물음에 부딪힐 때도 있다. 도무지 이 고질불동의의 세상이 다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질 것 같은 기분에 힘겨운 때가 있는 것이다. 그때마다 나는 활동경력이 훨씬 많은 다른 활동가들과 마주 한잔 하면서 이런 저런 것들을 질문하고는 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라도 말이다. 그때마다 그들은 나에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용기와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그러면 다시 의욕이 생겨나는 것 같았다.

요즘 새로운 회원 한분이 들어오셨다. 때때로 게시판에 이런 저런 질문들을 던지기도 하시고, 열의에 가득 차 거의 모든 일정에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다. 그 분을 보면서 내가 처음에 동인연에 왔던 작년 여름을 떠올려 보았다. 나 역시 그렇게 열정적이었던가 생각해 보면, 그보다 더했던 것 같기도 하다.

놀라운 일은 나도 꽤 습관한 솜씨로 그분의 질문들에 적절한 대답을 드리고 있다는 점이다. 누가 알려 놓고 가르쳐 준 적도 없는 일인데 나도 어느새 그렇게 되어 있었다. 일년 전 가입 당시, 내가 질문할 때마다 적절한 답을 막힘없이 제시하여 마냥 부럽기만 하던 그 활동가들보다는 못하겠지만 말이다.

아마도 나는 앞으로도, 이 불공평한 세상을 바꾸는 일이 정말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에 부딪히며 살아갈 것이다. 여름이 해마다 찾아오듯이, 자연스럽게 말이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앞으로도 새로운 회원이 들어올 것이며 그들도 나처럼 자신도 모르는 세에 다른 사람에게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명씩 늘어나다 보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 가을이 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그 증거로 우리 성소수자들은 성전환자 성별정정을 이뤄 냈으며, 동성애자에게 너무도 가혹한 군대에게서 피해자를 구출해 내고, 그들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냈을 뿐 아니라 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막무가내의 세상도 어쩌면 우리가 눈치 못 챌 정도로 아주 조금씩 그 이파리를 빨갛게 물들여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러스트 - 권진아

특집기사

퀴어 퍼레이드

'준비과정과 의의' '참가 후기'

기획기사 1 에이즈 예방법 2 군대와 동성애

CONTENTS

2-3 기획기사 1 - 에이즈 예방법
기자회견문

4-5 기획기사 2 - 군대와 동성애

6 연재기사 - 문학작품 속의 동성애

6 단신
다국적 제약회사 기자회견

6-7 특집기사 - 퀴어 퍼레이드
1) 준비과정과 의의
2) 참가 후기

8 광고 - 30% 진보포럼
나, 내일은 꽃피듯이

만평 혜인 - 에이즈 예방법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운동이 시작되다.

by_ 윤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에이즈 예방법)은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높았던 1987년에 제정되었다. HIV에 대한 정확한 지식보다는 불치의 병이라는 공포에 기반해 만들어진 법은 감염인의 인권 증진이라는 국제적 흐름을 고려하기보다 감염인을 관리하고 질병을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법적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현재까지 네 차례 개정되었지만 에이즈 예방 패러다임의 근본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2006년 말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개정안을 다시 마련하였고, 이 법안은 현재 법제처를 거쳐 2006년 9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도 그동안의 개정절차와 마찬가지로 감염인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는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독소조항들과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문구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질병관리와 감염인 지원의 차이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에이즈라는 질병은 개인의 부도덕한 행위로 발생한다는 것이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에이즈는 사회적 불평등 때문에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은 감시와 통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의학의 예방과 치료기술의 해방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질병으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파산하거나 가족이 해체되는 일이 없어지는 것, 그리고 질병에 취약한 사회적 환경을 없애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에이즈 감염인들은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집단이다. 예방법에 남아있는 독소조항들로 인해 그동안 삶의 단절과 고립을 경험해왔다. 이는 감염인들의 삶을 위축시키고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아직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정보와 오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진하는 지금의 에이즈 예방정책과 이에 기반한 에이즈 예방법으로는 진정한 에이즈 예방을 이룰 수 없다. 이제 에이즈 예방 패러다임은 감염인들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그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

검사만 익명으로 하면 무슨 소용인가?

복지부는 예방법 5차 개정안에서 '익명검사' 조항을 새로 신설함으로써 피검사자가 익명을 요구할 경우 익명으

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검사 후 피사도는 의료기관이 신고해야 할 정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만 두고 있어 감염인 정보 중 어떤 내용이 보고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또한 정부는 감염인들의 생명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어서 가족의 생명 직위까지 작성하는 '감염자관리명부' 없이는 지원체계 마련의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감염인 관리명부'는 감염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살생부와 같다. 관리명부에 들지 않고서는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지만 정부는 그 어떤 노력도 없이 핑계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감염인에 대한 이유 없는 차별과 편견을 인정하고 이미 에이즈 예방법을 폐지하였고, 연령, 성별, 기타 후생노동령이 정하는 사항만을 신고하도록 하며 감염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병력정보는 비밀누설금지조항을 둘 정도로 그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다. 특히 에이즈 감염인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피해받는 집단이기에 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5년 10월 수혈 에이즈 감염에 대한 예방책으로 감염인 병력정보를 대한적십자사로 넘기겠다는 보건복지부 정책에 관련 법안이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정보인권 당사자와의 협조, 인권침해 요소를 없앨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감염인을 질병을 퍼트리는 시한폭탄으로 보지 말라

감염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뿐인 '전파예방행위 금지조항'은 추상적 위험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어 감염인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주는 동시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처벌규정을 통하여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국민들이 감염인을 예비범죄자처럼 여기게 하고 있다. 만약 전염이 되어 타인의 생명에 위해가 가해졌다면 형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최근 국제 에이즈 총회에 보고에 따르면 실관계 현실, 혹은 비약 주사바늘 공유를 통해 HIV를 감염시키는 사람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법 규정들이 오히려 에이즈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 복지부 개정안은 감염인이 주소를 이전할 때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감염인들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전염병 예방과는 아무 상관없는 감시의 수단일 뿐이다. 그리고 현재 전염병예방법은 발병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1군 전염병에 대해 주소이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HIV/AIDS는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3군 전염병이다.

감염에 대한 치료와 보호는 감염인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다.

감염인에 대한 치료는 의학의 판단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감염에 대한 치료는 누구보다도 감염인 스스로 원하는 것이다. 그런 대도 개정안은

'치료 및 보호'

에 대한 정의나 의미규정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에이즈 감염을 영장 없는 강제처분이 가능한 사유로 두고 강제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에이즈의 전염경로와 감염인 인권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그대로 들어내는 규정이다. 오히려 문제는 치료를 받고자 할 때 높은 비용어부담과 병원에서의 비밀누설, 차별 등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현실을 간과한 채 정부는 마치 감염인들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데도 치료를 회피하는 집단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은 모두 감염인들의 입장을 중심에 두고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감염인도 일하고 싶다. 집단강제검진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UNAIDS/WHO는 개인에 대한 HIV 검사는 3Cs 원칙(Confidential, Counselling, Consent) 즉,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고, 검사에 있어서는 상담이 수반되어야 하며, 수검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일부 기업 등에서는 입사 전부터 HIV테스트가 시행되고 그 결과는 사업주에게 통보

사진출처 - L&B3R



되고 있어 부당한 해고사유가 되어왔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처럼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신원, 비밀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감염이 되면 국가의 감시의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강제검진조항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오히려 공중보건체계로부터 소외시킨다. 본인의 동의 없이 검사하는 검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감염인에 대한 차별의 근거가 되고 있다. UNAIDS는 수혈 혹은 장기기증시를 제외한 강제검진은 국제인권법 상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이미 경고한 바 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감염인들의 신원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어 차별을 받았을 때 구제할 수 있는 절차이다. 그리고 모든 감염인들의 입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이 규정은 강제검진의 대상을 배우자 및 동거가족,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진 성행위 상대자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물론 감염의 가능성이 있을 때 감염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받는 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며, 특히 여성배우자의 경우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조항으로는 대상자의 범위가 쉽게 확대될 수 있고 제도의 남용 위험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외국에 대한 강제검진 규정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감염인을 강제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현재 외국인노동자가 국내에서 감염이 되었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강제되게 대상이 된다. 때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강제송국 되는 경우도 있다.

모든 사람은 국경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곳을 이동할 자유가 있으며, 이동과 인권보호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장기체류 여부나 직업, 배우자 여부, 에이즈 전파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아태지역의 에이즈 인권 권고안 등 국제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부당한 인권침해이며 외국인 감염인들을 오히려 불법체류자가 되게 하거나 치료의 사각지대로 숨겨 만들어 예방차원에서도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

현재 감염인, 보건 의료, 인권시민, 성소수자 단체들이 함께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공동행동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정부의 파행적인 에이즈 정책을 예방법 개정 및 폐지시키는 활동과 더불어 감염인의 인권침해 현실과 차별과 편견에 맞서는 활동을 벌일 것이다. 81년부터 시작된 에이즈, 이제는 감염인 당사자가 자신의 목소리 가지고 에이즈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다함께 편견과 낙인, 빈곤의 역사가 아니라 평등과 희망을 꿈꾸는 저항의 역사를 만들어가자.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이 바로 에이즈 예방이다> -기자회견 전문-

에이즈가 발견된 지 25년, 한국에서 HIV 감염인이 확인된 지 20년이 지났다. 그러나 한국의 에이즈 인권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그 현실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에이즈예방법이다. 1987년 허풍지붕 만들어진 에이즈예방법은 지금까지 네 차례나 개정되었지만 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본질은 그대로다. 즉 감염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겠다는 것이 에이즈예방법의 역사를 지탱하고 있는 패러다임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다시금 에이즈예방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지만 개정안은 감염인들과 에이즈를 바라보는 후진적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에이즈예방법은 HIV 감염인들을 마치 질병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회복원처럼 여긴다. 감염인들이 주소를 옮길 때마다 부과되는 신고의무조항이 대표적이다. 이는 전염병예방법에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제1군전염병에서나 부과되는 의무조항이다. 전혀 다른 질병인 HIV/AIDS에 대한 신고의무는 감염인들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할 뿐이며 전염병예방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감시의 수단일 뿐이다. 누구보다도 치료를 원하는 것은 감염인들인데도 에이즈예방법은 치료를 위한 지원은 뒷전이고 치료를 원하지 않는 감염인이 있을까 전전긍긍하며 강제치료조항을 두고 있을 정도다.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HIV 검사와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어길것까지 않는 검사결과 통지 등이 감염인들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은 현존한다. 감염사실의 폭로로 수많은 감염인들이 직장으로부터 쫓겨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빈곤의 나락으로 빠지는 데에도 에이즈예방법은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다. 감염인들을 고립시키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은 질병 자체보다도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다.

에이즈는 감염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다. 에이즈는 개인의 잘못, 부주의한 성행위 의 결과로만 여겨져 질병을 잃는 것이 오히려 낙인의 이유가 되어왔다. 그러나 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더욱 많이 감염되는지, 왜 여성들이 점점 더 많이 감염되는지, 그 중에서도 결혼한 여성들이 더욱 감염되기 쉽고 아이들이 점점 더 많이 HIV에 감염된 채 태어나는지에 대해 질병의 원인을 개인의 행위로 돌리는 인식은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한다.

감염인들의 인권증진이 바로 에이즈예방이며 여성,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빈곤이 종식될 때 에이즈는 사라질 수 있다. 한국의 후진적인 에이즈예방법은 새로 쓰여져야 한다. 우리는 에이즈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향해 에이즈예방법 대공의 첫발을 내딛는다. 감염인들을 억압할 뿐이며 에이즈예방의 단추를 잘못 끼운 에이즈예방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투쟁은 국경을 넘어 전세계의 감염인들과 인권옹호자들에게도 번져나갈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번도 감염인의 목소리로 이야기된 적 없는 진실을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공 공동행동





2006년 2월8일 동성애자인권연대 메일로 한통의 상담메일이 도착했다. 2005년 6월 입대한 한 동성애자로부터 온 상담메일이었다. 이 상담메일은 '훈련소에서 비밀이 보장된다는 약속을 받고 밝힌 자신의 정체성이 훈련병들 사이로 퍼져나갔고, 그로 인해 훈련소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 라고 시작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가볍게 개인의 하소연쯤으로 받아들였지만, 직접 대면상담이 들어갔을 때는 개인의 하소연으로 치부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가 군에서 경험한 모든 사실들이 매우 충격적이었고 끔찍하기까지 했다. 훈련병 생활 이후, 그는 자신의 동료들과 생활하지 못하고 바로 의무대로 옮겨졌다고 한다. 의무대에서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그 어떤 치료도 주지하지

않고, 오히려 '헌혈했느냐'라고 물으며 동의 없는 에이즈 검사를 강제 했다고 한다. 또한 군 간부로부터 욕설과 함께 동성애자임을 입증하라고 강요받았고, 그 형식은 동성과 키스하는 사진은 물론 성관계한 사진까지 있다면 가져오라는 식이었다.

그 순간을 회상하던 그의 얼굴은 두려움에 굳어버린 상태였다. 상담을 끝내고 난 뒤, 우리는 이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규정된 '강압구제' 조치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여성, 인권단체들에게 상담사례를 알리기 시작했고 모두들 본 사안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회의 개최와 진상조사단 구성에 합의했다. 한

국성폭력상담소는 본 사건을 '동성 간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하였고 인권단체 인식회의는 성소수자 차별의 성격, 군대와 맞선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여러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피해자가 군에 복귀하는 시기를 연장하는 것과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서둘렀다.

그동안 존재했지만 침묵해야 했고, 남성 동성애자들이 외로워 경험하는 안 좋은 추억거리쯤으로 여겨져 왔던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내 걸었다.

- 첫째, 피해자의 조속한 전역조치 및 피해보상
- 둘째, 군형법 및 군인사법 상의 동성애 차별조항 삭제
- 셋째, 가해병사 및 간부 등에 대한 처벌 및 대인마련

전혀 중요하지 않던 군 당국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언론에 사건이 공개되자마자, 해당 부대 간부는 피해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유가 연장조치 및 전역조치'에 구두 합의했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2005년 커밍아웃한 병사 8명을 복무부처함으로 전역조치 시켰다.'라는 언론 면피용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부대와 피해자 조사를 하기 시작했지만 관련 부대에서는 피해자가 경험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가 군인의 신분이란 점을 이용, 휴가기간 만료를 들먹이며 군 복귀를 종용했다. 막무가내 식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병을 죽자 넘기지 않으면 군사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잡자 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내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피해자의 신변안전과 심리상태 체크가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아주대 병원에 정신과 진료를 의뢰했다. 정신과 전문의의 최종진단은 '주요우울장애, 대인기피, 자타위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증'이었다. 의사는 환자의 상황이 매우 위험하고 자살위험이 높기 때문에 절대 부대복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진상조사단의 밀고 당기는 실랑이 끝에 피해자는 결국 군 상급병원으로 가야했다. 그리고 국방부는 나름의 대안으로 4월1일부터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4월26일 국방부 장관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한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과 그가 받은 진단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에 대한 수정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다. 그 답은 매우 간단했다.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니 민원사로 다시 할 것' 간단한 한 줄로 돌아온 답변은 동성애자 인권을 우롱하는 국방부의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동성애자는 더 확대될 것이다.

(사례2) 2000년 여름, 군입대후 1달 정도 지나지 않아 중대장과 함께 면담을 하는 도중 본의 아니게 커밍아웃을 하게 되었다. 내무실 내부에서 소심하다. 여 성스럽다. 조용하다는 이유로 관심 사병이 되었고, 뒤이어 중대장과의 면담과정

에서 폭증소하고 집요한 질문에 커밍아웃을 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나는 중대 의무대에서 상담을 받았다. 곧이어 혁정 병원으로 후송을 가게 되었다. 원래는 간단한 상담만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거의 반강제적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다. 병원에서의 생활은 거의 악몽과도 같았다. 군의관과의 상담 도중 심한 구타를 당한 것은 물론, 수치심을 들게 하는 질문들-특히나 남성과의 성관계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과 학생병들의 노골적인 농담-"화장 실을 두 개 볼 수 있어서 좋겠다" 등와-에 많이 힘들었다. 그 이후, 다시 청동 병원으로 후송. 그곳에서 일주일간 독방 생활을 하고 다른 환우들과 다른 침실을 사용하는 등 동성애자로서 많은 차별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대우를 받았다. 다시 국군대전통합병원으로 후송.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쏟아지는 수치심 유발 질문들은 끝나지 않았고, 언제나 참치리에 돌 때마디 간사를 받아야 했다.

군의관은 "게이 같지 않은" 외모라면서 군 1년 동안 여러 병원을 옮겨 한 번 다시 제대로 복귀 시켰다. 지대에서의 생활 역시 마찬가지였다. 병보관과 중대장 등이 나의 병명생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으며 심지어 다른 사병을 동원해 감시를 맡히기도 했다. 부대 내 성범죄 사고 유감저조 낙인찍힌 나는 언제나 감시 속에서 생활로 인해 언제나 심신이 지쳐있었다.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회원사례 -

(사례2) 1996년 9월 입대한 나는 이듬해 시절, 선양병원이 후임병들에게 오는 편지를 훔쳐 읽는 일로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주변 병사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심하고 결국 탈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곧바로 복귀를 하 큰일은 없었지만 부대원들이 대부분 알게 되었다. 사고이후 생활이 더 힘들어져 자퇴한 뒤의반으로 청동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17개월 반 정도의 병원을 하게 되었다. 처음 후송되던 날, 안경을 벗기고 옷을 벗고 침대에 있는 상태에서 발로 차이며 '호모가 좋다'라는 식의 욕설을 들어야 했다. 3일간 욕망에서 거부와 자책으로 격리되었다. 이후 격리가 풀려도 낮과 밤에 생활은 다른 환우들과 달랐다. 낮에는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하고 밤에는 홀로 욕망에서 자야 했다. 무슨 약인지도 모르는 약을 매일 먹고 강제적으로 HIV/AIDS 검사도 받았다. 상담을 따로 받은 적은 없다. 단지 군의관이 위한 치료는 모든 환우들이 함께 오면 침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에 드는 간혹침고 일어나 재대하고 싶으면 누구 한 명 건드려라'라는 식의 말 뿐이었다. 내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부모님께 알려진 것이었다. 부모님께 알려야 한다는 병원원칙에 나쁜 비밀보장요구는 완전히 묵살되었고 병원에 면회를 오실 때마다 물고 가서는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병원생활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병전역이 되지 않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성애관을 그대로 군의관에게 이야기했고, 그 후 지대 복귀 판정이 났다. 그렇다고 지대 복귀 후 생활이 편안했던 것은 아니다. 병원까지 갔다 온 사병이라 큰 상사병 1호에 등록되었으며 공제군무에서도 제외시켜버렸다. 가거스로 만가면 면을 하던지, 복귀 후 생활은 불안과 초조의 연속이었다. 자신을 어떻게 볼까 하는 불안한 마음과 함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가해의 책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동성애 성향을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수군거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안일 불안했다.

이상에 중심적으로 맞춰진 이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살아야 한다. 자신의 정체성이 누군가에게 알려질까 가슴을 졸여야 하고 때로 이성애자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 밝혀진 순간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만약 군대에서 자의든 타의든 자신의 정체성이 알려졌다면 과연 주변 동료들과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사례를 통해 보면 '전혀 아니다'라는 답을 얻을 수 있다.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동성애 생활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그를 자유롭게 놓아 주지 않을 것이다. 관습사병으로 인식되어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주변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과 언어적인 폭력에 눈감고 있어야 한다. 임시발령으로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비밀보장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넘어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벌어지는 채형, 주변동료들과 공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격리, 특별한 조치 없이 벌어지는 언어폭력이 난무한다. 전역을 염두 해 두고 있지 않은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정체성이 알려진 후 군대에서 다시 생활하는 것 그 자체는 자신의 생을 건 그야말로 보험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실시하고 있는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은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동성애자 사병의 인권을 과연 보장할 수 있겠는가?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지난 2월에 폭로된 한 동성애자 사병의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개최된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후 국방부는 4월1일부터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마치 군복무 중 동성애자들의 처우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의 내용은 동성애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초악한 동성애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부터는 국방부의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이 군 복무 중인 동성애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지침으로 활용될 수 없는 이유를 짚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정되었는가?

관리지침을 제정한 배경을 보면 마치 일부 내용은 - 3년 간 자살사고 2건 / 현역복무부적합처리 25건 / 언어폭력 및 알코올 인한 자살 사고 발생 - 국방부가 군대 내 동성애자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듯 하게 보인다. 또한 신상비밀 유지, 에이즈 감염제한 금지 등 동성애자 인권권을 보호할 것처럼 보이는 지침들도 눈에 띈다.

하지만 필요대장 설명에 있어 ‘동성애자 병영 내 유입, 확산 차단대책 미비 / 병영 기피 수단으로서의 악용 우려’ 등의 문제를 덧붙이며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군의 특수한 환경에 의해 일부 장병들이 동성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고 군대 내 동성애자가 존재하면 여타의 장병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유입, 확산’이라는 표현과 관리지침 내용 중 ‘이성애자로 전환 희망 시 적극 지원한다.’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동성애는 ‘유입, 확산, 전환’이라는 개념과 양립될 수 없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은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며, 정체성을 형성하고 인지하는 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동성애 확산’이라는 표현은 매우 부적절한 용어이자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이다.

아울러 ‘전환’은 비과학적의 방정이나 경향, 상태 등이 다른 것으로 바뀔’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 즉 이 용어정의에 따르면 ‘동성애’ 향한 성지향이 이성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석이 된다. 역으로 이성을 향한 당신의 성지향이 동성애로 향하도록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성애자 전환을 희망할 경우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채육, 동아리 활동을 권장한다고 했는데, 이는 지나치게 문상적인 말이라 생각된다.

둘째, 동성애자는 특별관리의 대상인가?

관리지침에서 국방부는 군입대 전 후 인정검사를 통해 ‘동성애 성향 잠재자’로 밝혀지면 집중관리하고 대대장 관심사병으로 두겠다고 하였다. 동성애를 단지 행위로서만 접근하고 사고하기 때문에 나온 말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동성애 성향 잠재자는 곧 처벌권을 저지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집단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관심사병은 곧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되는 것이자 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곧 ‘동성애자를 초기 식별하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지금처럼 특별한 2,3차 보호조치가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인권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의 신상 비밀 보장하겠다고 ‘성 지향성 심문조사를 지양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실태조사’ 연구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장병검사를 실시하는 인정검사를 통해 군복무 부적응자가 걸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군 당국도 관심사병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관심대상 병사 3,924명 중 1%에 해당하는 40명만이 부적응자 판정을 받아 전역하는 등 형식에 그침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그 군 관심사병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어느 한 동성애자가 군에서 커밍아웃을 한다는 것은 나름의 용기와 의지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주변 환경적,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전역어부에 무게 중심을 두지 않고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인지 등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각 요인에 따라 세부지침도 달라야 한다. 동성애자를 식별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두는 것만으로 완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큰 오산이다. 오히려 2,3차 인권침해 가능성을 더욱 높일 뿐 당사자의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이 자명하다. 일반병사와 동등하게 관리하겠다는 하울 좋은 말 속에 좀 더 강화된 관심사병제, 식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자침이 있는 한 그 어느 것도 해결될 수 없다.

피해자는 현재 ‘주요 우울 장애’로 최종 전의 판정을 받았고, 성폭력 상담소의 도움으로 치료비 지원도 얻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록 소극적인 권고였지만,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을 수정할 것과 13명의 가해병사, 간부를 대상으로 주의를 주고 육군참모총장에게 병사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하였다. 절반의 성공이다. 국방부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전면 수용하고, 지난 1월에 발표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듯이 동성애자 차별 법률들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상당사제로 시작되어, 피해 당사자의 구제를 받는 절차까지 긴 시간의 투쟁이었지만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인권단체, 성폭력상담소 등 연대단체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연대였다. 만약 동성애자들만의 고립된 투쟁으로 갔다면 국방부는 뒷방귀조차 끼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된 군대 내 동성애자 차별 철폐 토론회에서 ‘인권 운동사상방’ 박재

군 상임활동가는

이번 사건을 접하

며 군대가 많은 문

제를 가지고 있었

던 것은 알고 있었

지만 성소수자 인

권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천박한지

몰랐으며 소수자

들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받느냐

가 그 사회의 인권

척도가 될 수 있다

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전쟁 없는 세상’의 또 다른 활동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소수자들의 대대복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수평위로 떠올라 진지하게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진상조사단은 이제 병영 내 동성애자 사병의 인권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

한 고민 속에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두고 차별법령의 개선, 관리지침의 폐기, 군 인권

교육 제도화를 위한 투쟁으로 활동을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그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전역조치를 위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졌었다면, 이제 근본적인 대안을 위한

논쟁을 시작해야 한다.

천박한 인권감수성과 사회적 편견과의 투쟁은 때로 끝없이 표류하는 것처럼 보이기

도 한다. 하지만 이번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다. 동성애자 커뮤니티들이 상담

에 포커스를 맞추어 활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례 하나가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제로

물리게 한 것이 아니라, 군대 내 동성애자 억압 문제로 까지 확대할 수 있었던 것. 그

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외쳐야 하는 것과 지지와 연

대의 대상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얻은 진정한 성과다.

by_윤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사진출처 - 내외부

QUEER PARADE

지난 6월 10일 2006년부터 캐나다 개최되고 있는 퀴어 퍼레이드에 동인연도 참가했다. 개인적으로 이번 퍼레이드가 첫 번째 참가였다. 첫 번째 참가였던 만큼 기대도 매우 컸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인 거라 한복판으로 나서는 생각에 다소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다. 주변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모두 커밍아웃하고 나름대로 동성애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나조차도 그런 부담감을 완전히 떨치지지는 못하고 있었으니 조금은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했었다.

행사 당일엔 비가 많이 내렸다. 맑은 날씨를 기대했던 나에게도 다소 실망스런 일이었지만 현장에 도착해 보니 굵은 남비 따위는 전혀 문제조차 되지 않았다.



비가 그렇게도 많이 내리고 있었지만, 출발 직전이었던 종묘공원은 많은 외국인들과 한국의 게이 레즈비언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건혹 아는 얼굴을 만나거나, 화려하게 꾸민 옷을 입고 환하게 웃는 사람들을 보면 흐린 날씨조차도 환하게 밝아지는 듯 즐거운 기분이 들었다.

동인연은 많은 단체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지 않았다. 생각된다. 우리는 행사장에서도 종종 전보보위에 대한 홍보와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으며, 이러한 내용들은 한국 게이, 레즈비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관심이 초점이 되었다. 한 가지 인상적인 예를 들자면, 나는 미국의 동성애자 시의원이었던 척비밀크의 사진이 붙어있는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내가 뒤편에서 그것을 들고 서있자 많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게 바라보거나 멀리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행동으로 격려의 메시지를 표시했다.

퍼레이드와 행렬이 출발하기 시작하고 나는 웅크린 몸을 두려움과 함께 두근거리는 기대감으로 앞 수 없는 기분이 되었다. 행렬이 거리로 접어들 때까지 거의 한 바퀴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차도도 다시 걸어가면서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한 나는 일본에서 왔다는 유학생과 몇 마디 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침착하고 당당해

졌다. 신나는 음악이 흐르고 게이 레즈비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밝힌 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자랑스러운 기분을 느끼게 되었다. 이 차별과 억압의 땅에서 게이라는 사실이 그토록 자랑스러운 적은 이따도 처음이었지 않았나 싶다.

우리가 힘찬 걸음으로 거리를 가로 지르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개중에는 인상을 쓰며 욕지거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행하니 신기한 듯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는 행렬에 뛰어들어 한 사람의 목살을 움켜잡은 할아버지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내 손에 들려 있는 하얀 피켓을 생각하면 두려울 것이 없었다. 동인연 행렬에 속해있던 사람들이 들고 있는 차별에 대항하는 표어들을 생각하면 두려워해서는 안되었다.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지나던 사람들 중 몇몇이 우리 행렬에 뛰어들어와 같이 걸어도 되겠다고 물었다. 또 한참을 걸으면서 우리에게 욕을 해대는 사람들에게 대항기를 하기도 했다. 어떤 청년이 행렬을 향해 '힘내세요! 파이팅!'이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었다. 앞까지도 모조리 훑어 들었지만 오히려 힘이 넘쳤다.

퀴어 퍼레이드는 원래 미국에서 발생한 당시 문화행사가 아니었다. 차별에 저항하는 미국 동성애자들의 항의행동이었던 '스톰프 아웃'이 그 기원이다. 나는 그 의미를 제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은 실제로 퍼레이드에 참가하고 보니 더욱 확고히 굳어졌다. 앞으로 동인연은 퍼레이드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구호들을 들고 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더욱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내년 퍼레이드에 참가할 생각이다.

2006 퀴어퍼레이드 참가 후기 by_ 해와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유쾌한 행동절정! 2006 퀴어퍼레이드 참가단 'Rainbow Action'

by_ 병권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차별 없는 세상은 그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실정체실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무수한 억압과 차별적 상황에 놓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기 힘든 성소수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 하는 것만으로 차별 없는 세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다.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힘을 겹겹으로 억압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 그치지 않는 한, 퀴어문화축제 중 퀴어퍼레이드는 성소수자들에게 큰 의미를 가진다. 이성애만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 단조로운 세상에서 다양한 정체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퍼레이드가 단순히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는 것을 경계해야 할 한다. 우리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퍼레이드를 통해 더 큰 의미를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더 큰 의미란 크게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성소수자에 대해 무지한 일반인들에게 '너와 나의 다름'으로 인해 '차별과 억압'이 성소수자 앞에 놓일 수 있다는 '인권 감수성'을 고루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우리가 그저 이해를 받아야 하는 '피해'의 수혜자에서 그치고 일찍이 하고, '차별과 억압'을 끝장내기 위한 주제로서 부단히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매년 퀴어퍼레이드에 성소수자들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참가단을 조직해 참가해왔다.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정체체성, 인종, 나이, 성별을 뛰어넘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열린 참가단이었다. 특히 청년의 경우, 출 7가지 주제로 복선을 나누어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외침으로써 상징적인 퍼포먼스로 연대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올해에는 보다 구체적인 화두를 가지고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주된 주제는 최근 화제가 되었던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문제와 성전환자 차별정체 문제, 그리고 HIV/AIDS 감염인 등의 인권 보장과 동성결혼 보장이었다. 올해 초 군대에서 한 동성애자 병사는 자신의 정체체성이 발각됨과 동시에 강제 에이즈검사, 상관에 의한 채을 요구 등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훼손당했다. 또한 성전환자들은 보수기독교에 의해 정신병자로 대우받으며, 보수연군은 차별정체가 아직 군대 면제후단으로 이용함에 관한 감금에 의해 이들의 권리를 난도질했다. 보건복지부는 포로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HIV/AIDS 감염인들을 비롯한 법정결혼 병력자들이 개인 생활 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넘기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방침을 발표했다. 동성결혼은 우리 사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논의의 기회조차 박탈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을 불법화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번 퀴어퍼레이드에서 'Rainbow Action'은 진정한 '행운'의 판도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직도 성소수자들의 모습을 '거이하게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체적 구호를 소리 높여 외쳤다. '동성결혼 보장하라!', '성별정정 보장하라!', '배간조항 삭제하라!', '군종보다 차별철폐!'는 거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올해 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은 '퀴어당당 퀴어행동'이었다. 이러한 슬로건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 조금 부족하다고 느낀다. 앞서 말했듯, 차별 없는 세상은 그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이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퀴어퍼레이드 참가단 'Rainbow Action'은 보편적 인권과 성소수자들의 행복을 위한 구체적 외침을 보여준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일주일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이번 퀴어퍼레이드 행렬을 비롯한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과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성소수자위원회의, 만민인권본주의 단체, 다문화, 인권단체연석회의, 이주노동자 동지들, HIV/AIDS 인권연대 나누라+,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AC를 비롯한 분들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2006 성소수자 진보포럼 Rainbow Action

2006. 7. 29 - 30

연세대학교 공학관 A020/A012/학생회관

주최 동성애자인권연대

(전사회 공동주최 한국HIV/AIDS 감염인연대 KANOS)

후원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문의 02_778_9982 lgtpride@empal.com

포럼

7월 29일 / 17:00 - 18:30 / 공학관 A020

“섹슈얼리티, 고위험군 그리고 에이즈!”

문현아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활동가

변진옥 -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활동가

정숙 -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7월 30일 / 16:30 - 18:00 / 공학관 A020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과 HIV/AIDS감염인 인권”

강석주 - 한국HIV/AIDS 감염인연대 KANOS 사무국장

윤호제 -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대표

부러진 부메랑
인권의 날개를 달다.

부러진 부메랑
인권의 날개를 달다.

영화상영

7월 29일 / 19:00 - 20:20 / 공학관 A020

“반격하라! 에이즈에 맞서라!”

- Fight Back AIDS, 15 years of Act UP

- 제임스 헌지 감독 / 2002년 작 / 75분

전시회

7월 29일 - 30일 / 공학관 A012

“부러진 부메랑 인권의 날개를 달다!”

- 영상, 일러스트, 작가展 / 에이즈와 인권 선전 전시물

후원주점

7월 30일 / 18:30 - 21:30 / 학생회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대응 투쟁기금 마련 및
에이즈 감염인 지원을 위한 동성애자인권연대 9주년 후원주점”

고 육우당 추모집 '내 혼은 꽃비 되어' 발간

동성애에서는 육우당 추모집 '내 혼은 꽃비 되어'를 그가 세상을 떠난 3주기를 추모하는 의미로 발간했다. 이번 추모집에는 고인이 생전에 써 놓았던 시와 시조, 일기와 유서들을 모아 실었으며 사간 당시 여러 단체에서 보내온 추모의 글도 함께 실었다. 이 책은 고인이 영원불변 시조집 발간의 꿈을 추모집의 형식을 빌려서 이루어 주고자 하는 작은 노력이다.

추모집을 통해 고인이 청소년 동성애자로서 이 사회에서 느꼈던 억압의 정도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참박한 심정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의 애환에 대해 이해하고, 소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믿는다.

끝으로, 이 책이 발간되는 데에 소중한 도움을 주신 여러 단체와 개인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청소년 동성애자의 '소외' 문제를 주제로 한 소설 '나' 출간

청소년 소설을 주로 발간하고 있는 출판사 비림의 아이들에서 고 육우당의 사간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소설 '나'를 출간했다. 이 책은 청소년 동성애자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국내에선 거의 유일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주제와 사간 해결의 과정에 청소년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이해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작가인 이경희씨는 정치적으로 매우 올바른 관점에서 청소년 동성애자들을 이해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는 동성애자들은 자신이 겪었던 혹은 겪고 있는 학창시절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이며, 성관계성으로 인한 가족 내에서의 갈등과 우정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성애자 독자들은 동성애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 들여다보고 그들이 자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한 인간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이 책의 인쇄의 절찬을 동성애자 인권연대 앞으로 기탁해 주신 작가이경희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BOOK



만평 - 에이즈 예방법 (감염인의 노동권 보장)

해인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동성애자인권연대
LGBT human rights solidarity in Korea